

한라포커스 신음하는 제주바다의 실태<상>

## 육상 배출 오염물질로 자정능력 상실

보목·색달·서부하수처리장 주변 해역 오염 심각  
 방류관 반경 200m 이내 해역 유용해조류 초토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인근선 중금속 초과 검출

매년 집중호우시 제주도내 하천으로부터 해안으로 유입되는 각종 육상 쓰레기와 하수처리장·육상양식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제주바다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죽어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이하 수연)은 지난 3년 동안 조사한 제주연안어장의 해양생태환경 실태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이 가운데 보목·색달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된 오염물질은 주변 해역 조류의 영향으로 외해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연안으로 재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하수처리장 방류관 주변 반경 200m 이내에는 유용해조류가 서식하기 힘들 정도로 수중생태계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원·보목·색달하수처리장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은 중금속(납·아연)이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도내 한 수중생태전문가는 “문섬에는 자리돔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보목바다에 있던 자리돔은 사라지고 있다”며 “이는 자리돔 서식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보목·색달하수처리장 방류관이 바다쪽으로 900m 나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다 1km를 추가해서 하수처리 방류수를 외해로 흘려보내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성산 파도의 습격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1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해안에서 높은 파도가 도로를 덮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국립공원 확대 논의 재개 주춤

코로나19 여파 공청회 지연  
 도, 올 상반기 중 개최 예상

잠정 중단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공청회 일정이 지연되는 등 논의 재개가 주춤하고 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자 환경부 국정과제로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공원 구역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km)에 중산간, 곳자알, 오름, 해양 등의 환경자산을 포함해 현재의 약 4배 가량 확대된 총

610km 규모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임·어업인들이 생산활동 제약 및 규제강화 우려와 사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반발하면서 공청회 등 각종 행정 절차 진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4월 공청회를 개최(잠정)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제주도 측은 올

상반기 중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향후 공청회와 도지사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해 조정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갈등관리 권고안 도출도 늦춰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오은범기자

## 민간 전기차충전사업자 지원 사업 추진

도, 설치비용 일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도내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2020년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사업 육성 사업'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한 민간투자 부담을 해소하고 민간 중심의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공동주택·주유소·편의점·식당·커피숍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사업육성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민간충전사업자다.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지원 규모는 사업비 7억원을 투입, 7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급속충전기 용량에 따라 최대 1700만원(1기당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이뤄지며 다만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064-710-2655)로 문의하면 된다. 고대로그자

## 고사 위기 제주경제 '심폐소생술'

고용유지지원금·특별보증 신청 규모 역대 최대  
 특별보증 재원 3000억원으로 ↑... 절차 간소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다음날인 1월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 규모는 총 298건·3627명이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99건·833명)와 2017년 사드 보복(202건·1928명) 때보다 많은 것으로, 앞으로 신청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유통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진행되는 '코로나19 특별보증'의 경우는 보증서 발급 1200건, 보증심사 중 2600건, 상담대기 4000건으로 평균 처리 기간이 2-3주에 달하는 상황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제주도는 지원 규모 확대와 절차 간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에 들

어간다. 이번 조치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는 휴업·휴직 수당의 지원 규모가 기존 75%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다음 중 지정고사가 이뤄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홍보·접수 절차를 확

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특별보증의 경우에는 '신속심사' 제도를 도입해 2-3주 걸리던 처리 기간을 3일로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체 상담 중 80%를 차지하는 3000만원 이하 용

자금에 대해 기존 6가지 심사 단계를 3가지로 간소화하고, 업력 1년 미만·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제외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1일부터 6개 금융기관(제주·기업·신한·국민·하나·우리은행·농협)에 10명의 전문 상담 인력을 파견하고, 신용보증재단 내에는 신속심사팀을 3개반·25명 체제로 편성한다. 이 밖에도 당초 1000억원(도 800억원·정부 200억원) 규모인 특별보증 재원도 최대 3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내 확진자 4명 모두 특별관리지역에서 감염돼 입도했고, 확진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이에 대응하는 방역 대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일상 속 방역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뒤따라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는 전후방의 경계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이 방역 주체이고, 모든 지역과 기관단체가 방역당국이어야 합니다.

#### 코로나 극복 도민 3대 실천 수칙

-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접촉을 자제합니다.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며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이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와 가족, 이웃, 제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했습니다. 제주를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